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 의 문

1992년 8월10-11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등 6개국에서 참가한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한 이상의 상처 노예화와 인간 존엄성 및 살의 심각성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인 극기권력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강제인행, 윤간, 고문, 학살등 전대미문의 잔학한 범죄이다. 이것은 기부장제와 군국주의 전쟁이 일어나 조직적으로 이상을 상처로 유린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아말로 전쟁범죄의 제벌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7월6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시죄에 그치고 과거 스스로 저지른 죄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채 진후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PKO 법안을 통과시켜 지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놓은 데 대해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아시아 이리 나라의 진정한 이웃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진후 처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민간 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회의에 모인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태국, 일본 6개국 대표들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를 결성했다. 이 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전쟁때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종군위안부 실태조사를 계속한다.
2.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보상, 역사교과서 수정 등 일본의 책임있는 진후처리를 촉구한다.
3. 우리는 유엔을 위시하여 세계 인권 기구들에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4. 우리는 금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아시아 이리 나라들도 아시아 연대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아시아 이상의 인권신장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의 참석자들은 일본정부가 참회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1. 일본정부는 아시아 이리 나라의 이상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인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2. 일본 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문제”의 진모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쟁에 의해 발생한 그외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아시아 시립들, 특별히 아시아 이상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희생자들과 아시아 각 국의 이상들에게 원전하고도 납득할 만한 원전한 공개시죄를 하여야 한다.
4. 일본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여 “강제종군위안부”라는 이름하에 아시아 이상들을 강제인행, 매춘을 강요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일본학교 교과서에 망기하여 가르치야 한다.

1992년 8 월 11일

“정신대 문제 아시아연대” 회의 참가자 일동